< 서울마루 공공개입 2023 질의 요청 및 답변서 >

(※ 홈페이지 공개 자료 : 서울마루 평면도, 구조평면도, 입면도(동측, 남측))

구분	질의사항	답변내용
참가자격	•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 참가 가능 여부	•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참가 가능 • 건축관련 전문가임으로 환경디자인, 조경엔지니어링 자격 응모 가능 • 개인참가는 안되고, 건축사 사무소(연구소), 설계회사 등 건축관련 사무소에 등록되어진 전문가 응모 가능 (건축관련 전문가) • 참여자가 외국에 있을 시 한국에 로컬 파트너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
	• 건축사 자격증이 없지만, 환경디자인, 조경엔지니어링 자격으로 공모 참가 가능 여부	
	• 한국과 해외에서 업무 병행 중, 한국에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 참가 가능 여부	
실적증명	• 과거의 경험과 실행능력에 대한 별도 증명서 등이 필요한지	• 심사 중 확인이 필요 시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
	• 경험(유사프로젝트)의 범위 기준이 있는지	• 범위의 제한이 없어, 참여자가 판단하여 제출 서류 시 소개 가능
제안서	• 제안서 구성 순서 기준 여부	• 자유롭게 구성 및 제안
	•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부 이외에, 북, 동, 남측에 임시구조물(스탠드, 구조 기초부 등) 설치 및 배치 가능여부	• 북쪽 : 협소해서 불가 • 남쪽(덕수궁) :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에 불가 • 동쪽(대로변) : 전시관 앞쪽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는 불가 함. • 작품 설치물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, 현재 상황에 적합한 (안) 제안
	• 높이제한 여부	• 높이 제한 없음 • 단지, 주변 조화, 안전 문제 등 고려 필요
	• 본인 작품 외 참조 사례 활용(크레딧 부여) 설명가능 여부	• 참조사례는 사용 가능하나,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하고 본인이 디자인한 내용인지, 레퍼런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해야 함.
	• BF나 무장애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예술적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	• 심사 시 설계의도를 강조하여, 최종작으로 선정 후 심의 등을 걸쳐 실제로 구현되어야 하니, 현실적인 구현 방안이 마련한 자료 제출 필요 • 과년도 선정 작품에는 BF나 무장애를 적용하진 않았음.

구분	질의사항	답변내용
제안서	• 바닥 고정이 필요할 시, 바닥 고정 방법 및 범위 기준	• 모든 공사는 원상복구 원칙 • 고정 시 하부시설(열선, 배수로 등) 파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함. • 필요 시 구조 검토 필수
심사발표 및 심사평가	• 참석이 불가 할 경우, ZOOM 또는 사전녹화 등 다른 대안으로 대처 가능 여부	• ZOOM, 사전녹화 불가 (현장참여 필수) •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, 대표자를 대신 할 수 있는 "공동참여자(협업자)"가 발표
	•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분(또는 타분야 전문가)과 협업으로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의 발표 진행 가능 여부	
	• 제안서 피드백/심사평 가능 여부	• 심사평은 접수 작품의 수를 확인한 후,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후 안내 예정 • (단, 최종 선정작품에 대해선 심사평 필수)
자료제출	• 설계사무소 소개자료 익명성 여부 • 설계사무소 소개자료에 건축가 성명, 사무소명 공개 여부 • 공모 참여자 정보(이름, 사무소명 등) 자료가 심사기준 외적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	• 참가자 이름, 설계사무소명 등 정보공개 (익명 불가) • 1회때부터 익명이 아닌 참여자들 이름과 설계사무소명 등을 공개하여 평가하고 있음 • 참가작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의 역량과 그동안의 작업 및 경험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, 그 가능성 까지도 고려하여 공정성을 기반 종합적으로 평가 • 작품성을 중점 평가
예산	• 제작예산 1억2천만원, 설계비 1천만원 상세설명	• 선정작의 경우, 선정작 상금 1,000만원과 제작 예산 12,0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급 • 제작 예산은 실비 정산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환
	• 특정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시, 예산 일부를 해당 전문가의 용역비로 지불 가능 한지 여부	• 설계비 1.2억은 최종 선정된 작가가 자유롭게 예산 편성하여 집행 가능 • 단, 서울시 예산인 만큼 예산 집행 규정은 서울시 또는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집행